

# 건설노조 '거래중단 강요' 발각... 과징금 4300만원 처분

공정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부과  
건설기계 임대료·지급기일 결정 등  
조합원 간 이익 추구... 경쟁 제한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로 '갑질'



건설노조 소속 부산·울산·경남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지난 2022년 파업에 돌입해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인근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구성사업자와 건설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받는 혐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 기일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

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 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 등을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 콘크리트 펌프(펌프카)는 약 50%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영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인 이른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올 수출바우처 사업규모 561억 '역대최대'

산업부, 코트라와 멘토링 등 진행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한 규모  
대상 기업, 779개사 → 1100여개사



지난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한 307억 달러, 수입은 19.2%가 줄어든 3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이달 12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연간 누계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관세청은 지난 21일 밝혔다. 비가 내린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대상 바우처 활용 세미나, 상담회, 1대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기업들의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해외 영업지원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20%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중소기업(6.3% ↑)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올해 바우처 발급 규모는 561억원으로 전년(419억원) 대비 34% 대폭 확대

해 역대 최대 규모다. 바우처 활용 중소기업도 전년 779개사에서 올해 1100여개사로 확대한다.

또 참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전문위원이 1대 1 멘토링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급망 분야에 대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해외인증 지원 범위를 600개로 확대한다. 흥해 리스크 등에 대응해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상반기 모집 후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선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집한다.

이밖에 ▲수행기관 서비스 가격 정보 확대 공개 ▲수행기관 진입기준 완화 ▲이중가격 운영 방지 감독 강화 ▲바우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해 건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해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출바우처는 기업의 수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가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안덕근 "석유·LPG 가격안정화에 '총력'"

(산업부 장관)

현장방문해 "상생정신 발휘" 강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600원대, 1500원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날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특별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으며, LPG 업계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지난 4개월 간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등 국민 물가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근로복지기금 예산 233억으로 상향

근로복지기금, 전년비 21.4% 늘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올해 대폭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전년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에서 10년 사이 34.1%까지 내려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게 골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